

# “대통령 4년 연임제 공감”

## 국회의원과 임기 일치에는 의견 엇갈려

■ ‘헌법개정시안 광주·전남 공개토론회’

### “대통령 궐위 대비 부통령제 검토해야”

‘헌법개정시안 광주·전남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한 공감하면서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인위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 헌법 개정에 대한 공포와 부작용으로 개인이 현실적인 관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26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병복 조선대 교수는 “책임정치 구현과 국정 연속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 중임을 허용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번에는 임기와 관련한 부칙 조항만 개정하고 다음 정부에서 영토조항과 인권문제 등을 포함 포괄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통령 궐위의 확인은 헌법재판소보다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석 광주경찰서 사무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킬 경우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4대 지방선거에서 보듯 특정당의 독점으로 경제와 균형이 깨질 우려가 높다”며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 문제를

정·부통령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대통령 임기 조정은 차기 정부부터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한호 광주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 개인 논의에 영토·인권 문제 등 다양한 논제를 끌어들이는 경우 논의가 사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26일 오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광주·전남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위장광기자 jrwi@kwangju.co.kr

실상 불가능하다”며 “차라리 원·포인트로 권력구조 개편만 하는 게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되 2012년 봄에 동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선숙 변호사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면 중임간격의 기회가 없어지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들은 특히 대통령 궐위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토록 한 조항에 대해 반대하며 부통령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진호 법무부 차관의 개회사, 김영준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헌법개정시안 설명에 이어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4명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한국 살자면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 “대북지원 ‘퍼주기’ 아닌 미래위한 투자”

노대통령 사우디 동포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5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자면 친북도 해야 한다.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한다”며 “북한을 우호하고 원수로 만들어놓고, 그 우환을 언제까지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를 공식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국시간 26일 새벽) 리아드 시내 알 파이잘리아

호텔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대북지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퍼준다’고 하고, ‘너 북한하고 친한 정권, 친북정권이 나’하고 할 수 있느냐, 세상에 대한민국에 친북정권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친한 친구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지 않느냐. 환상 미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과거를 극복할

것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마음을 융서하 거 어려운 몇 가지가 있다”고 전제한 뒤 “한국전쟁은 국민들로서 잊기 어려운 일이라는 하지만, 옛날 일만 가슴에 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열어야 할 길을 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라고 가가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

해 해결한다는 일관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들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구박을 너무 세게 받았다”고 소감을 피력한 뒤 “북한보고 ‘독하게 안한다’고 별로 퍼준 것도 없는데 보기에 따라 퍼줬다고 해 줄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지원은 꼭 해야 한다”며 “그것은 투자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남북관계가 열리고 북한이 개방되면 한국경제는 또 한번의 경쟁력을 갖고 세계시장에 힘차게 진출하는 계기가 된다”고 역설한 뒤 “이를 위한 가장 큰 장애가 북핵을 위해서 새롭게 열어야 할 길을 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라고 가가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

경찰직 수험생 및 직장인(20~40세) 공무원합격 절호의 기회!

# 교정직 특채

360명 남자:329명 여자:31명

시험일정: 5월 13일 개강 4월 2일

원서접수: 4월 9일~4월 15일

시작부터 합격까지! 합격생들에게 100%검증된 서울고시학원에서 합격의 꿈을 이루세요!

**서울고시학원** 복구청 맞은편 (062) 251-7959

#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4월 2일 첫진도 개강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227-8003 (무도정 앞 전일빌딩 뒤)

971-0002 (백마트 침단점 및 광주은행 4F)

희소식 수료 한남대정

기장주부 실업자 지방취직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료 환급 출석률 80%이상시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무관\*

전국 최강의 강사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유명 출판사 저자 직강\*

탁월한 합격 시스템

출결관리 학습 성취도에따른 개별 분석지도

자습실, 사물함 무료 사용

236-2467~8 (동부경찰서 옆)

국가직/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 김종규 광주직강!

김종규 교수님

2007년 4월 5일(목), 4월 12일(목)

매주 목요일 18:00~22:20

300명 선착순 접수, 수강료 60,000원

개강 4월 5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합격-한빛에있다! www.hanbitgosi.co.kr

# 공무원

9급문제풀이

9급이본반

9급공직특별반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합격률 100% 5월 합격특강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4월 2일

234-0234 (동부경찰서 옆)

# DJ “남북정상회담 을 상반기가 좋아”

“홍업, 여론 안좋지만 말리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6일 보도된 매일경제 창간 41주년 특별 담에서, 6자회담 성공시 남북관계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6자회담의 상설화를 제안했다. 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며, 그 시기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올 상반기에 열리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차남인 김홍업씨 출마와 관련, “주변에서 좋은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죄를 증명한 사람이 나와 허위진술이었음을 고백한 데다 자식에게 고생만 시킨 아버지

로서 자식이 명예회복하겠다는 데 솔직히 하지 말라고 하기 어려웠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2003년 6월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된 뒤 4년여 만인 2월 사면돼 동고동에 복귀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애뜻한 마음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대통령은 “박 실장이 잡혀가기 전에 찾아와 자신이 ‘동고동의 장세동’이 되겠다고 하더라”면서 “당시 나는 ‘장세동은 나쁜 일을 대통령에게 권유했으니까 책임질 일이 있지만 당신은 민족을 위해 옳은 일을 한 것인데 책임이 있다고 하면 내가 나쁜 일을 시킨 거냐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북한에도 좋겠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한 이익이 된다”며 “북한 퍼주기라 아니라 퍼오기 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과 관련해 “국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총리가 올인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해 고칠 것은 고치고, 걱정하는 부분은 대책을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남북 계획에 대해선 “가게 된다면 6자회담 진전이나 남북 정상회담 성사와 같은 문제보다는 향후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할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범여권 때문에... 장상-박상천 희비

장, “정계개편 주도 못할 것” 루머 확산에 고민

박, “외부 비호감에 되레 지지율 상승” 표정 관리

민주주의 새로운 선장 자리를 놓고 장상 전 대표와 박상천 전 대표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이 장 전 대표에게는 호감을, 박 전 대표 비호감의 입장을 보임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장상 전 대표는 범여권의 일방적인 러브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범여권이 ‘장상 전 대표가 경선에서 승리, 대표가 되는 것이 민주세력 대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흘리면서 민주당 중심의 정계개편을 요구하는 대의원들의 표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일각에서는 대통합에 유연한 성향인 장 전 대표가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범여권에 휘둘리면서 정계개편을 주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악성 루머도 확산되고 있어 참모진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26일 장상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에서 장 전 대표 지지 입장을 나타내면서 민주당 중심의 정계개편을 원하는 대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열린우리당은 도움이 되지 않는 집단”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수와 성향이 강한 분이 대표가 된다면 오히려 현역의원들과의 반목 등 당내 분열로 민주당의 위기가 깊어질 것”이라고 박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에 반해 박상천 전 대표 측은 범여권의 비호감 표시는 지지율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표정관리에 나서며 모습이다.

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에서 박 전 대표에 경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박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경륜이 있고 상대하기가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표는 민주당 중심의 중도개혁 신당 창당에 최대 적인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김동철 ‘대북송금 재특검’ 내달 발의

범여권 부정적-정치권 피장일듯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이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금강산 관광사업 로비자금 유용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안을 오는 4월 초까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치

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범여권에서는 특검법안이 이미 일당락된 대북송금 사건으로 불똥이 튀어 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며 김 의원이 ‘오버’하고 있다는 논총을 보내고 있어 미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6일 김동철 의원은 기자회견의 통화

에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현대그룹 로비자금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 권노갑씨에게는 무죄를, 박지원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 측에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특검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며 “우선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아 오는 4월 초까지 국회에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